

국민소통위원회,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맞춰 ‘국민의 인권 보호 최우선’ 대응체계 강화

- 민주파출소 중심 허위조작정보 집중 모니터링 및 신속 대응 -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부터 시행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맞춰 온라인상 유포되고 있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민소통위원회는 이번 개정이 온라인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구제 수단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제도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하며, 민주파출소를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과 플랫폼 신고, 법률 대응을 연계한 종합 대응체계를 본격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응체계를 대폭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허위조작정보를 법률에 최초로 규정하고,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반복 유포자에 대한 법적 책임도 크게 확대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불법정보 유형 확대 및 허위조작정보 법제화

불법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고, 허위조작정보를 법률에 최초로 규정하여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법적 대응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 불법정보 유형에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폭력·차별을 선동하거나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혐오정보를 추가하였다.

또한 허위조작정보를 ①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허위정보'와 ②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한 '조작정보'로 구분하여 법률에 최초로 규정하였다.

아울러 허위 또는 조작된 정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풍자와 패러디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표현의 자유도 함께 고려하였다.

▲ 플랫폼 책임 및 신고제도 강화

국민 누구나 허위조작정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했다. 대규모 플랫폼은 이용자의 신고를 검토한 뒤 삭제, 접근 제한, 노출 제한, 계정 정지, 수익화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조치 사유와 이의신청 절차를 신고자와 게시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 플랫폼 운영의 투명성 강화

신고 처리 현황과 국가기관의 조치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대규모 플랫폼은 반기마다 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현황, 이의신청 처리 결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받은 명령·권고와 이에 따른 조치 등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플랫폼의 신고 처리와 자율규제 운영 실태를 조사·감독할 수 있게 된다.

▲ 피해구제 및 사실확인 체계 확대

신속한 권리구제와 객관적인 사실확인 기반을 마련했다. 허위조작정보 피해자는 분쟁조정 절차와 게시자 정보 제공청구 제도를 활용하여 보다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플랫폼은 사실확인단체와 협력하여 검증 결과를 서비스 운영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 손해배상 및 과징금 제도 강화

반복적·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 유포에 대한 책임을 대폭 강화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며, 피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도 법원이 5천만 원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법원 판결 등을 통해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유통할 경우 최대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벌금도 기존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됐다.

국민소통위원회는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민주파출소를 중심으로 온라인상 유포되고있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허위조작정보가 확인될 경우 사실관계 확인과 증거 확보를 거쳐 플랫폼 신고, 법률 검토, 민·형사상 대응까지 연계하는 통합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반복적·악의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생산·유포하는 계정과 채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요 플랫폼의 투명성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플랫폼별 운영 현황과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허위조작정보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현 국민소통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는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하며 민주주의와 공론장을 훼손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며 “이번 정보통신망법 시행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과 피해구제 수단을 한층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이라면서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 허위조작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소통위원회는 민주파출소를 중심으로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과 법률에 근거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온라인 공론장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 김현입니다.

오늘부터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히 법 조항 몇 개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어 온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확산의 심각성을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AI와 SNS를 기반으로 정보가 생산·유통되는 환경에서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노린 조직적·상업적 허위조작정보가 반복적으로 생산되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허위조작정보는 단순한 의견이나 비판이 아니라 거짓과 왜곡을 통해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오인하도록 만드는 정보입니다. 이는 선거와 정책 등 공적 영역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사회적 갈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악의적인 허위 조작 정보가 한 번 유포되면 클릭 수와 광고수익을 노린 2·3차 재생산으로 피해자의 명예훼손과 경제적 피해는 물론 민주적 의사결정 왜곡, 공동체 분열 등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한 번 유포된 허위정보는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확산되고, 그 피해는 개인의 명예를 넘어 사회적 갈등과 국민의 올바른 판단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는 특정 언론매체를 통해 중국인에 의한 부정선거가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조작정보가 유포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북한군에 의해 5·18이 발생했다는 명백한 허위사실도 유포된 바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허위조작정보’를 처음으로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했다는 점입니다.

허위이거나 조작된 정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 유통하는 행위는 이제 법률상 명확한 책임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플랫폼의 책임이 한층 강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제 국민 누구나 포털, SNS, 동영상 플랫폼 등에서 유통되는 허위조작정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은 신고를 접수하면 이를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삭제나 접근 제한, 노출 제한, 계정 정지, 수익화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했는데 어떻게 처리됐는지 알 수 없었던 과거와 달리, 앞으로는 처리 결과와 이의신청 절차도 함께 안내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플랫폼 운영도 더욱 투명해집니다.

앞으로 대규모 플랫폼은 반기마다 허위조작정보 신고 건수와 처리 결과, 이의신청 처리 현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받은 명령이나 권고의 내용과 이에 대한 조치 결과 등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해야 합니다.

국민들도 플랫폼이 허위조작정보에 얼마나 책임 있게 대응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허위조작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도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해졌고, 법원에서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유통할 경우에는 최대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역시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이번 법 시행에 맞춰 대응체계를 전면 강화하겠습니다.

민주파출소를 중심으로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를 더욱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겠습니다.

허위조작정보가 확인되면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증거를 확보한 뒤 플랫폼 신고와 법률 검토, 민·형사상 대응까지 체계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생산하고 유포하는 계정과 채널에 대해서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법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입니다. 정부나 정당에 대한 비판, 다양한 의견과 토론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반드시 보장될 것입니다.

국민소통위원회 역시 이러한 표현의 자유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허위정보를 만들고, 이를 반복적으로 퍼뜨려 개인과 사회에 피해를 주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허위조작정보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객관적인 사실과 법률에 근거해 대응하겠습니다. 허위조작정보로부터 국민의 권리와 건강한 공론장을 지키기 위한 대응이라는 원칙을 끝까지 지켜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허위조작정보를 발견하시면 민주파출소를 비롯한 신고 창구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의 올바른 알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온라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